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김 주 삼*

목 차

- | | |
|-----------------------|------------|
| I. 서론 | IV. 한국의 대응 |
| II. 북중경제협력관계 변화요인 | V. 결론 |
| III.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 | |

〔 논문 요약 〕

이 논문은 북중경제협력 관계변화가 향후 한반도통일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분석한 것이다.

중국은 G2 국가로 등장하면서 세계질서에서 새로운 축을 형성하면서 동북아 지역문제에 대한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두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동북아지역에서 특수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경제·군사적 부문에서 공고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북중 경제협력강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대한 전반적 경제변화를 가져 올 수 있으며 특히 경제적 부문에서의 양국의 협력관계강화는 새로운 모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08년 2월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남북관계관계가 경색되자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중국에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여 북중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북중경제협력 관계 변화요인은 우선 2012년 북한의 강성대국 건설과 둘째, 창지투(Chang-JI-Tu)개발계획, 셋째, 남북관계의 경색과 북한의 전략적 이해의 일치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은 한반도 통일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파급효과는 한반도경제 변화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북중경제협력 관계변화의 영향력은 첫째, 북한이 대외개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며, 둘째, 북한이 그동안 중공업우선정책에서 경공업 정책전환과정에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셋째, 남북한의 통일비용을 절감케 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변화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은 첫째, 북한의 대외개방에 협력적 자세를 지향해야 하며, 창지투개발계획에 대한 참여와 경색된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통일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 북중경제협력, 동북아정세, 한반도 통일환경, 남북관계

* 조선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정치학 박사

** 이 논문은 2011년도 대한정치학회·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하계학술회의(2011.6.22, 계명대 의양관 국제세미나실)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I. 서 론

2011년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기간의 중국방문은 최근 북중경제협력과 북한의 후계 체제구축을 확고히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0년에도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동북3성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북한의 절박한 입장을 중국측에 전달함과 동시에 북중관계의 공고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일련의 외교적 활동은 한반도 정세와 2012년 동북아정세변화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대북정책 기조와는 대조적 입장을 보임으로써 금강산 관광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태까지 발생하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특히 6월 1일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비밀접촉 시도까지 노골적으로 폭로하면서 한반도 통일환경 분위기는 더욱 침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지대에서의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개발합의에 착수함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대장정이라 불릴 정도의 장거리 방문은 북중관계의 돈독한 우의와 북중의 전략적 이해의 일치를 한 면에 보여주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귀국 이후 북중경제협력은 압록강 일대의 황금평과 라선지역에 대한 양국의 공동개발 착공식 개최 등은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통일환경에 많은 시사점을 부여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2009년 11월 동북3성 개발을 위한 동북지역진흥을 위한 장지투개발계획을 국무원에서 국가개발사업으로 승인하고 본격적인 개발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지투개발계획은 중국의 국내적 사업이면서 북한과 러시아, 몽고 일본, 한국 등이 참여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제적 투자 및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주목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지난 19세기 러시아에게 연해주지역을 넘긴 이후 한반도 태평양지역으로 진출을 할 수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북한의 라진-선봉항을 통해 태평양으로 진출한다는 원대한 포부도 있다고 하겠다.

북중관계는 이러한 중국의 국가개발사업과 맞물리면서 북한은 김정일 이후 후계자로 2010년 김정일을 지목하여 후계체제를 공식화하고 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국제적 역량인 중국의 국제적 지원을 담보로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명박정부 집권 후 남북관계는 이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확연히 차별화됨으로써 남북관계는 계속 경색되고 대립관계가 장기화 되고 있다. 남북관계 경색은 북한으로 하여금 그들이 목표로 내세운 2012년 강성대국 건설 원년을 달성 데에는 많은 차질을 빚게 했으며, 그들로 하여금 보다 안정

적이고 지속적인 북중경제협력과 혈맹관계의 결속카드를 빼들게 만들었다. 북핵6자회담의 재개여부와 남북관계 개선의 재개, 3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여부 등이 불투명한 상황하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는 민족적 과제라는 연속선상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경제협력에 대한 관계변화가 향후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에 목적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II. 북중경제협력관계의 변화요인

1. 2012년 강성대국 건설과 후계체제

북중관계는 북한정권이 수립된 이후 60년 이상 혈맹관계에서 전략적 이해관계로 발전해 오면서 순망치한(唇亡齒寒)의 특수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북한이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배경과 이유는 대략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사회주의 국가 동맹국이라는 점이다. 둘째, 북한은 현재 식량, 원유 등 전략물자의 공급을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북한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효과적인 외교적 지지·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넷째, 미·일에 대한 중국과 북한의 불신과 공동 안보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²⁾

2012년은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70회 생일, 김정은 30세 생일을 맞이하는 해이다. 또한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건설의 원년을 목표로 인민경제의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중공업 우선 경제정책에서 경공업 부문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의 핵실험 강행하고 장거리 미사일발사실험 등 체제생존과 국가방위시스템의 구축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도 해석된다.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논거로써 법·제도적 정비 측면을 들 수 있는데 북한은 2009년 헌법개정을 통해 1998년 이후 현실 속에서 진행되어 온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국가령도체계를 헌법상 제도화시켰으며, 공산주의를 사회주의 강성대국으로 대체하였다. 2010년 9월 28일 개최한 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정확히 30년만에 당규약을 개정하였다.³⁾ 개정된 신 규약에서는 주로 수령 유일영도체제와 후계자의 유일관리를 정당화하고 제도화시켜 후계체제의 안착을 도모하는데 주력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로 이에 대한 김정은 후계구도 사업은 2010년 9월 노동자대표회에서 김정은을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임

2)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p.77 참조.

3) 이기동,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국방연구』 제54권 제1호(2011.4), pp.78-79.

명과 조선인민군 대장 승격은 북한 후계체제의 공식화 및 공고함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북한은 김정은 3대 세습체제가 국제사회로부터 따가운 시선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이후 안정적인 세습을 통해 김정일 이후 국가체제를 보장하고 강성대국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비 작업을 단행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인민들의 지지와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정치적 지지를 함께 이끌어내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경색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부문을 남한이 아닌 중국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중국의 자본과 기술지원은 필수적이었다.

둘째, 김정은 후계자가 김일성, 김정일로 이어지는 혁명3세대로서의 적통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난 1920년대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김일성이 중국공산당 항일혁명가들과 활동했던 동북3성지역에 있는 일제 항일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중국 정치지도자들과의 정치적 신뢰를 증진시키고 김정은이 북중혈맹관계의 후계자라는 적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면 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0년 2차례, 2011년 5월 모두 3차례의 중국을 방문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경제정책은 북중경협이 강화되는 2009년을 전후로 큰 변화를 보여왔다. 2009년 이전 경제정책은 시장개혁과 계획경제 복원 간 갈등 속에 제기되었다면, 2010년 이후에는 주체경제(자립적 민족경제)의 확립과 대외개방이 동시에 추진된 것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⁴⁾

둘째, 2010년 5월 김정일의 중국 대련지역 방문은 대련(大連)이 국제금융과 외자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대련이 동북3성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달된 국제금융도시라는 점에서 북한의 향후 개혁·개방을 위한 사전답사 차원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2010년 8월 김정일위원장의 지린성(吉林省)의 성도(省都) 창춘(長春)과 지린(吉林)시 등의 방문은 매우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다. 우선 지린시는 김일성 주석이 중학교 2학년까지 학습을 했던 위윈(毓文)중학이 있는 도시이며, 김일성은 이 중학 2학년을 마지막으로 학업을 중단하게 되고 일경에 체포돼 이후부터 중국 공산당원들과 항일무장투쟁대열에 나서게 된 역사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을 김정은을 데리고 답사하게 함으로써 송고한 항일무장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춘에서 후진타오 주석과 북중정상회담을 가졌다. 왜 하필 장춘에서 2010년 북중정상회담을 개최했는가는 여러 가지 해석과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장지투개발계획에 대한 협력문제와 상당히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이영훈, "중국의 장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호, p.7 참조.

즉 장춘은 지린성의 성도로서 창지투(창춘(長春)-지린(吉林)-투먼(圖們))과 북한으로 이어진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⁵⁾ 따라서 김정일은 이러한 항일혁명과 향후 북중경제협력을 위한 현장을 본인이 방문함으로써 북한식의 현지지도를 김정인 후계자를 학습시킴으로써 귀국 후 2010년 9월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공표하였다. 2011년은 동북지역을 비롯한 남방 양저우~난징~베이징으로 이어지는 장거리를 직접 시찰하면서 북한의 대외개방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분석된다.

2.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

중국은 2009년 창지투개발계획을 국가사업으로 발표하고 본격적인 동북진흥개발사업에 착수하였다. 2009년 11월 18일 중국 국무원이 승인한 「중국 두만강지역 개발협력 계획요강: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중심으로」는 중국이 창춘시, 지린시, 투먼시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며, 국가에서 유일하게 변경지역에 비준한 국가전략사업이기도 하다.⁶⁾ 즉 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를 신속한 개발과 국내외 연동하여 개발해야 한다는데 중요한 의의와 목적이 있다.

이는 지역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동북3성이라는 동북지역개발로도 간주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결코 국내적 사업성격이 아닌 국제적 성격으로 정치경제, 군사안보가 함께 내포된 국가전략 사업이다. 2010년 중국은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G2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중국은 2009년부터 제1차 '미중경제협력대화'를 워싱턴에서 시작한 이래 2010년 제2차 회의를 중국에서 개최하여 미국과 지구적 문제를 논의할 국제협력 파트너로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중국은 G2로서 태평양과 인도양에서의 정치경제적 패권을 장악해야만 하는 국제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고민도 안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대외전략적으로 평화발전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국제주의를 견제하고 국가이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웃과 동반자관계로서 선을 베풀어 나가는 원칙(以鄰爲伴, 以鄰爲善)'을 제안하고 분쟁문제에 있어서는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외교방식을 추구하고자 노력해 왔다.⁷⁾

중국은 그동안 동북지역에서 지형적인 불리점으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차단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라진-선봉지역의 항구를 이용해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창지투개발계획은 동북3성지역을 개발해야 하는 당면과제이지만 국가의 전략차원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차단하고, 라진-선봉항을 이용

5) 창지투개발계획은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지린성이 정부를 대신하고, 지린대학(吉林大學)이 연구기관으로 공동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6) 김주삼, "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5권 제1호(2010), p.117.

7) 陳鋒, 『21中國與中國與日本』(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6), p.109.

<그림 1> 중국의 창지투 선도구 개발계획



출처 : 이영훈,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호, p.5.

하여 한·미·일 후면에서 군사적으로 압박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군사전략 카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동안 미국은 일본과 한국, 대만을 자신의 핵우산권이자 동맹국으로 간주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형국을 그렸지만, 이제는 오히려 중국이 이를 후면에서 미국의 방위 전략구도를 깰 수 있는 군사적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21세기 세계질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며, 1979년 미중수교 이래 현재까지 미중관계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에 해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미중관계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왔고,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여 왔다. 그러나 동시에 추세를 잘 관찰해 보면 양자 간 긴장과 갈등의 강도는 점차 약화되고 협력을 향한 추세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오바마정부 집권 이후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전략

8) 김홍규, "21세기 변화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호(2011년 봄, 통권 72호), p.217.

적' 이란 것을 받아들였으며, 기존의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개최하던 전략적 대화들을 하나의 전략·경제대화로 통합하였다.⁹⁾ 이러한 현상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목소리는 약화되고 중국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도 직결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장지투개발계획은 동북3성의 지하자원을 중국 남방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있어서 운송비의 절감과 국제적 투자 등 경제적 부문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살펴볼 때, 한미일 군사동맹 지역 후면에 위치한 북중러가 미국을 압박해 들어갈 수 있는 또다른 상황도 쉽게 발견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지투개발계획은 중국의 또다른 외교적 문제와 연결시킨다면 이해가 쉽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인도양 연안에 있는 미얀마 남방지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기로 함으로써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어지는 해상 원유 수송로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향후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되면서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말라카 해협에서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미국지지를 이끌어 내 왔으나, 향후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서 상당한 정치경제, 군사안보적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다.

3. 남북관계 경색과 북중의 전략적 이해관계의 일치

북한은 이명박정부가 '비핵·개방·3000'을 기본 구상으로 하여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대립적 입장을 취하는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계기가 돼 남북관계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이후 남북관계는 점점 상대에 대한 비방과 적대적 입장으로 선화하면서 경제교역을 제외한 정부와 민간인의 남북교류는 점차 감소추세에 놓이게 되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는 이 문제가 UN안전보장이사회에까지 가는 사태까지 진행되고 우리 정부는 이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규정하고, 북측에 이에 대한 사과 없이는 어떠한 남북 당사간의 접촉과 교류는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이 직접 남측을 향해 포격을 가했는데, 이는 한국 전쟁 이후 처음있는 명백한 군사도발행위였다. 이명박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추진으로 남북관계는 양측이 상대에 대해 비난과 대립적 입장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북한은 북중경협을 남한을 대체한 돌파구로 선택하였다.

북한이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첫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방어막을 치기 위한 체제생존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오바마행정부가 집권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보다는 북핵포기를 전제로 한 일관된 입장으로 나갔다. 이러한 입장은 북핵폐기를 목적으로 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의 입장은 일

9) 김홍규, 위의 논문, p.219.

<표 1> 남북교역액 현황



출처: 통일부

치하여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는 입장과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번 마지막 6자회담에서 북한이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면서 6자회담의 재개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며, 북한 역시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입장에서 이 회담에서 북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다는 정치적 판단에서 북핵6자회담은 재개효과는 미지수인 것인 것이 현실적이다.

둘째, 북한은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2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는 미국 군사적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수단인 전략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확보함으로써 당분간 미국위협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통한 경공업발전을 통해 인민경제수준을 향상하겠다는 발표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공표를 해왔다. 이 부분은 북한이 발표한 매년 신년사 및 당 기관지 등 대부분의 공식적인 기관지에서 발표해 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중공업우선 경제정책에서 경공업 정책으로 비중을 더 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여겨진다.

하지만 북한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외무역은 중국과 남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국가와의 경제협화성은 필수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제2위 경제교역국이었던 남한이 2008년부터 남북경색국면으로 나오자 안정적이면서도 지속적인 북중경제협력카드로 방향을 전격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KDI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무역 중 중국과 남한의 비중은 지난해 81.7%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여기에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4% 남짓을 차지한 유럽연합과의 교역까지 전년보다 30% 감소한 1억 4000만 유로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의 대외무역 감소는 1998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다. 북한의 연도별 무역총액은 2000년 23억 9500만 달러, 2005년 40억 5600만 달러, 2008년 56억 4000만 달러 등이다.¹⁰⁾

이러한 북중 양국의 입장은 시기적으로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다. 2008년부터 중국은 연해 지역 경제개발 성공으로 낙후된 동북지역에 대한 동북진흥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시점에 북한과 국경을 연하고 있는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에 대한 공동개발에 대한 인식을 해왔다. 하지만 북한지역 공동개발에 있어서는 기술과 자본 부문에서는 중국측이 절대적으로 투자하고 노동력은 북한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북중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지역개발과 훈춘과 라진-선봉지구에 대한 공동개발과 경제협력은 2010년-2011년 정상회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Ⅲ.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

1. 북한의 대외개방 계기로 작용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 수치이다. 2008년 남북경색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의존도는 중국이 약 60%를 차지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북중간 경제협력지역은 압록강 지역의 황금평과 두만강 지역의 훈춘~라진선봉지역이다. 북한과 중국이 6월 7일과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에서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착공식에 이어 6월 9일 라선특구에서도 착공식을 가졌다. 단둥과 붙어 있는 북한 땅인 함경북도 신의주의 황금평(면적 11.45km²)을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양국이 사실상 '경제특구'에 해당하는 지역을 개발하기는 북중관계에서 처음이다. 북한이 확정한 '조중 라선 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 경제지대 공동개발 계획 요강'에 따르면 북한은 중국에 장기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황금평에 상업센터와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농업, 가공업 등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땅을 내주고 중국의 투자를 유치해 고용을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¹¹⁾

황금평은 그동안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 기간 고민해오다가 최근 북중공동협력에 합의해 북한과의 장기간 임대하여 이 지역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훈춘은 중국, 북한, 러시아 3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지대라는 점에서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중국의 입장에서 훈춘을 경과해 라선항을 통해야만 태평양으로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는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중국은 2010년 훈춘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장지투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북한은 2010년 라진과

10) 『한겨레』 2010년 3월 10일.

11) 『동아일보』 2011년 6월 9일.

선봉지역을 라선시로 통합하고 특별시로 승격시켜 대외개방을 위한 전진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북한은 라선항을 중국과 러시아에 장기간 임대해 주었고, 중국은 2010년 라선항을 통해 이미 출항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남한에서 2008년부터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자 이 지역에 대한 관광상품권을 중국 관광객에게 팔면서 금강산관광까지 확대하고 관광객 유치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그동안 북한이 대외적으로 개방한 지역은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남한에 개방하였으며, 압록강 지역에 있는 황금평은 중국과 공동개발하기로 하였고, 라진선봉 지역 중국은 물론 러시아에게도 항구를 임대해 줌으로써 대외개방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북한 지도를 놓고 볼 때 이 지역들은 북한주민 거주지역과는 상당히 이격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대외개방을 시험해보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당분간 북중경협이 대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난 1980년대 일본기업의 유치실패, 1990년대 두만강유역 개발과 2000년 신의주 특구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2000년 9월에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대외개방하려고 하였으나, 중국에서 당시 행정장관으로 임명된 양빈(楊斌)을 비리로 구속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말았다. 당시는 북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따라서 최근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접경지역의 황금평 공동개발은 북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중국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결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는 차이가 있으며, 향후 안정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고 하겠다.

2. 북한의 경공업발전의 활로 개척

장지투개발계획은 중국정부가 2020년까지 장춘~지린~투먼에 이르는 지역에 2020억 위엔(한화 458조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대형 국가프로젝트이다. 이 3개 지역은 지린성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고속도로 및 고속철을 통해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 및 곡물자원을 라진항에서 선박으로 남방지역으로 수송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발달된 철도가 구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열차보다는 선박수송이 물류비용면에서 훨씬 저렴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지하자원을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철도와 도로망을 보다 빨리 개발하고 훈춘지역을 국제무역도시로 개발해 북한과 러시아와도 국경무역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장지투개발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간다면 여기에는 현재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몽고, 한국, 일본도 외자투자와 기술지원이 가능해지며, 교통망이 구축된다면 참여국들의 공동시장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은 2011년 6월에 포스코가 장지투개발계획에 참여했다. 포스코는 중국 지린(吉林) 성이 창지투(長吉圖·장춘~지린~투먼)를 개발하면서 포스코에 투자를 요청해 온 데 대해 “지린 성 훈춘(琿春)시 물류기지 건설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통화강철과 합작사

업도 추진 중”이며 “지린 성은 북한과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과 사업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¹²⁾ 이는 중국 동북3성의 광물자원이 라선항을 출발해 포스코가 위치한 포항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몽골 대부분의 내륙물류가 중국 텐진항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장지투개발계획이 참여해 북한 라선항을 이용한다면 파생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3. 남북한의 통일비용 감소

북중관계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한국이 양국관계의 틈새를 파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북한의 광물자원을 장기간 중국에게 임대해주는 형식으로 장기간 북한지역을 임대해 주기로 했다. 북한은 중국에게 황금평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활용하여 낙후된 인민들의 경제성장을 향상시켜야할 입장에 놓여 있다.

한국은 2011년 기준 국제무역의존도가 88%를 차지하는 있는 입장에서 한중 간의 교역량도 2010년말 기준 약 1800억 달러로 중국과의 교역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의 중국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에서 중국을 배제한 대외교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입장이다. 중국은 2010년 세계 제2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북핵문제가 국제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관리적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북한의 경제수준을 향상시켜 정권의 혼란과 돌출된 행동을 억제하는데 최대한 주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중국의 대북지원정책은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지투개발계획 속에서 동북아지역 안정이라는 지역적 문제를 연결시키는 전략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남북 간 인적교류가 점점 감소되고 금강산관광이 중단되자 이러한 틈새를 중국이 한국을 대체하여 그 공백을 채우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정치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상당량의 광물자원에 대한 채굴권을 계약하여 확보하고 임대권까지 북한이 장기간 중국에게 넘겨줬다는 입장에서 향후 남북관계가 재개된다고 해도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경제적 지분을 얻을 수 부분은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 라선지역, 금강산 관광에 대한 한국의 대북투자는 한반도 통일과 민족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남북관계가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이는 북한으로

12) <http://news.donga.com>(검색일: 2011.6.15).

하여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교류와 안정이 보장된 중국카드를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IV. 한국의 대응

1. 북한의 대외개방에 협력

2010년 중국은 G2 국가로 부상되면서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군사안보, 환경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로서 해결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현상은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G2로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타이완과의 관계개선, 인적교류강화, 관세품목 면세조치 등으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되고 동남아시아가 중국경제권으로 편입되어 향후 약 20억 이상의 중화경제권이라는 거대한 시장형성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은 북핵실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을 다룬 유엔안보리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바 있다. 그동안 한반도문제는 한국이 그동안 국제적으로 위상과 지위 및 역할이 격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안보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분단국가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인 현실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념적 측면에서 북중관계는 사회주의체제라는 공통점과 전통적 혈맹관계라는 특수성은 한반도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매우 신중하게 대처해 나갈 부분이다. 특히 중국과 남북한(한민족)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이면서도 양자 간 국제적 행위는 서로 다르게 진행돼 왔다는 점에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중국은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한중관계를 그동안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적 국제관계구조는 북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 북핵6자회담, 천안함사건, 김정일 중국방문과 정상회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서는 두 국가의 친밀도와 국제관계는 한국이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이명박대통령의 중국방문 시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의 '한미군사동맹은 냉전의 유물'이라고 한 발언¹³⁾과 2차례의 북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실험 등에서 나타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제재조치에 등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다. 천안함과 연평도포격 사건 당시의 중국의 유엔안보리에서의 확고한 자세에 대한 한국의 대처방안,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등과 같은 대목에서는 한중관계와 북중관계의 차이점과 친밀도를 그대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관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13) 『동아일보』 2008년 5월 28일.

이러한 현상들은 결국 한중관계와 북중관계 그리고 한반도 분단체제와 직결된다. 이는 중국의 대외정책과 대외정책 기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전략은 화평굴기(和平屈起), 도광양晦(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為)라고 정리할 수 있다.¹⁴⁾ 1992년 8월 한중수교로 한국과 중국은 중국이 한국의 제1위 경제교역국이자 투자국, 제1위 무역흑자국이라는 점에서 단기간 한중관계는 상당히 빠르게 발전되어왔다. 그러나 북중관계는 이러한 한중관계의 눈부신 성과에 비추어 이념적, 정치적 관계를 제외한 사회전반적인 국제교류면에서는 매우 미약한 단계라고 분석된다. 이는 북한의 폐쇄적 체제에 기인한 점이 많다.

한중수교 이후 국제교류 속에서 한국인들의 대중인식이 점진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자본주의체제와 시장경제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기여를 했고, 중국의 대한국 인식이 전환돼 양국관계가 발전되어 왔다면 향후 중국의 대북투자와 경제지원 등이 북한인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추동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 측면과 한반도통일과정에서 이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변인은 북한 국경지역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한국과 중국을 연결해 주는 국제적 창구역할을 해주는 지역이라는데 의미가 크다.

이러한 변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수는 2010년말 기준 이미 2만 명이 넘어섰는데, 이는 2007년 1만명 돌파 이래 불과 3년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 퍼져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의 연령과 직업군도 다양하며 이들의 탈북동기도 최초 생계문제에서 이제는 삶의 질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탈북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는 이미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들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대부분 경유해서 중국과 기타 국가에서 몇 년간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탈북자 2만 1,000명이라는 수치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미 탈북자 출신이 가급인 통일부 통일교육원장(국가공무원 1급)에 임명되어 남북통일과정에서 함께 고민하는 상황까지 도달하고 있다.¹⁵⁾ 통일이 빨리 진행되는 늦게 진행되는 이들이 한국에 정착함으로써 한국의 정보는 북한에 상당 부분 침투해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탈북자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 대부분은 동북3성지역으로 거쳐서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점에서 현재 중국지역에 거주하는 비공식적 탈북자수는 더욱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G2로 부상한 중국의 역할은 북핵보유와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북한, 갈수록 늘어나

14) 화평굴기(和平屈起), 도광양晦(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為) 등 세 가지 표현방식은 중국경제력과 국력신장에 따라 대외전략이 조금씩 변화·발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G2 국가로 부상 이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대로 처리해나가는 유소작위(有所作為)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15) <http://news.mk.co.kr>(검색일: 2011.6.18).

는 불법 탈북자로 확산되는 치안문제, 한중교역량의 증가, 한반도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 또한 동북아지역 문제에 더욱 민감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 장차투개발지역의 동북아 공동시장 참여

장차투개발계획은 낙후된 동북3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정부의 국가전략사업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중국 국경을 접하고 있는 국가들과의 공동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는 국제적 성격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참여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이 반도라는 점과 한국지형이 분단체제로 인한 북쪽으로 육로를 이용하여 더 이상 진출할 수 없는 특수한 구조라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과의 국제적으로 협력해야만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시켜 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의 민족적 역량과 정치엘리트의 리더십의 한계로 분단체제라는 현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남북한도 이에 대한 종속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현실에 토대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한국과 중국의 신뢰증진과 이해관계의 일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 방안이다.

그동안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지난 시기 수많은 방안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제시와 접근을 시도했지만, 결국 남북한 간의 체제의 이질성과 현안에 대한 상호 입장차이를 일관성있게 진행돼 오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향후 남북한의 현안에 따라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접근방법은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어떠한 방도를 모색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해 본다면, 남북문제는 정치적 접근 보다는 경제적 접근방법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대안이다.

왜냐하면 한중관계를 그 예로 제시할 수 있는데, 한국과 중국은 1992년 8월 수교이전 상호 체제와 이념이 완전히 다른 국가였다. 하지만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은 정치적 신뢰 증진보다는 경제적 부문에서 전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1992년 수교 당시 한중교역량은 약 65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2010년말 1800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2015년까지 3000억 달러까지 추정치를 내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중수교 이후 인적, 물적교류는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중국이 1위 중국내 외국인 거주 제1위가 한국인이 차지할 정도로 가까운 나라가 되었으며, 한국인 2010년 기준 해외방문자수 1,248만 명으로 이 가운데 중국이 약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대비 27.5%가 증가했다.¹⁶⁾ 과거에는 두 국가가 이념적, 제도적 차이로 상호 견제하고 대립적 입장을 보였지만, 한중수교 이후 경제적 효과 창출을 비롯해 정치적

신뢰증진과 사회문화적 교류증진 등 한국과 중국에 대한 상호 인식전환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장지투개발계획에 한국의 투자와 참여는 한반도평화와 발전 그리고 동북아협력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 사업은 중국이 그동안 단 한반도 진출하지 못한 라선항을 통한 태평양진출이라는 전략적 이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한국의 경제적 효과 창출 이외에 정치적 신뢰증진과 동북아지역에서의 동북아경제협력강화와 남북관계 개선효과도 동시에 창출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장지투개발계획은 한국이 향후 경제시장을 확장하는데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하는 북한을 경유한 노선인 시베리아철도(TSR)과 중국철도(TCR), 몽골철도(TMGR)를 활용해야 된다는 미래적 측면에서 남북한 간 공동협력은 필수적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무역이 절대적으로 차지한다는 점에서 해외시장 확보와 개척은 국가의 지속적인 미래 동력이다. 분단체제는 북쪽으로의 육로 차단과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정치경제적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사안일 수도 있다. 북한은 이미 남한과의 경제력 격차에서 1인당 개인소득은 약 20배, 국민총소득은 약 37배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간격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기한 통일비용에 대한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이 민족의 비용절감이 당면과제라고 전제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은 북한 자체역량을 한국수준으로 견인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특수한 북한체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장지투개발계획 성공을 위해 북중 간 공동협력 합의한 시점에 한국은 이러한 호기를 한반도 미래지향적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나간다면 한국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역할론 격상과 협력파트너로서 경제적 지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3. 남북한 경색극복과 통일환경조성

남북경제협력은 이명박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 온 경제교역량은 수치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남북관계가 정치군사적,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는 상호 대립과 충돌, 비난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적 부문은 금강산관광 중단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큰 차이없이 오히려 남북교역량이 증가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난 것도 특이한 점이다.

16) <http://www.index.go.kr>(검색일: 2011.6.16), 한국관광공사, 「내국인 출구」 참조.

<표 1>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불)

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누계
반입	152	176	272	286	258	340	520	765	932	934	6,104
반출	273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6,590
합계	425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7	1,820	1,679	12,694

자료출처: 통일부(검색일: 2011.6.29), 누계는 '89~'09까지를 합산한 수치임.

남북교역량은 2008년에는 18억 달러 2천만 달러, 그리고 2009년에는 16억 7천 9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남북 간 교역이 처음 시작된 1988년 이후 2009년까지 누적 교역실적은 약 126억 9천 5백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¹⁷⁾ 이는 남북문제가 경제적 논리보다는 남북한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증감되고 조정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표 2> 2010-2011 남북한 반출입 동향 분석

단위(천불)

거래분류	2010		2011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Total Sum	868,321	16.6	383,396	-13.1
개성공단사업(2004~)	737,588	41.1	380,608	4.3
인도적지원(2004~)	16,570	-23.6	1,866	-79.0
금강산관광사업	1,340	-81.8	922	54.0
사회문화협력(2004~)	461	-20.5	0	-100.0

출처: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1.6.30)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그동안 경색된 남북한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남북문제는 한민족 당사자 문제라는 대전제 속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한민족의 미래 지향적 방향에서 현재의 난제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민족적 전제 앞에서 남북한의 이념과 제도는 다음 단계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동안 상호 이념과 체제 대립과 반목하는 대결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당사자 이외의 국가들은 자국이익에 우선을 두고 접근한다

17)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10』, 2010, pp.134-135.

는 국제적 현실주의를 결코 배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강대국의 논리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도 강대국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남북한문제해결에 정부의 대북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남북문제는 21세기 세계질서의 흐름속에서 G2로 부상과 중국의 입장과 역할이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즉 한국의 국제적 대응방식은 탄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족의 역사전환과정에서 편협하고 관념적인 사대주의는 결국 민족미리의 걸림돌로 작용돼 왔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미중시대에 직면한 한국의 선택은 사고의 유연성과 다자외교패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통일문제가 한민족이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라고 했을 때, 중단없는 통일교육은 실시되어야 하며, 한국 내 상존하고 있는 남남갈등 해결을 위한 관·민·학의 공동클러스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념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은 계급갈등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책임소재를 떠나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시민의식 교육향상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V. 결 론

한반도통일문제는 민족의 당사자 문제임과 동시에 동북아지역의 이해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상과제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은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남북통일방안과 교류방안에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남한의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5년을 주기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정치체도는 정권에 따라 대북정책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관된 남북관계의 유지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즉 보수적 정권과 진보적 정권이 언제 들어서느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대북포용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은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비판의 대상이 돼 대북정책이 수정되어 '비핵·개방·3000'의 상생공영의 정책으로 수정되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돼 대립적 관계로 돌아서고 말았다. 아직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 언제까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이는 미래 통일지향적 입장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남북문제는 남한이 스스로 관계개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북한이라는 특수한 국가체제를 상대로 외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지난 분단 기간동안 이미 검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경협이 활성화되어 이제는 남북관계가 북중관계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적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국제관계는 자국의 이익실현이 우선한다는 점에서 북중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북중관계가 우호적으로 진행될 지는 지켜볼 사안이다.

중국은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하여 그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경제전략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적 측면에서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미국과 일본,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안보적 포석도 깔려 있다. 북한 역시 이러한 중국의 대외전략처럼 북한은 단기적으로 2012년 강성대국 건설대국 건설을 위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대체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중국이라는 경제지원 카드를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의 전략적 이해는 단기적으로 일치돼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북중경협은 좀 더 지켜볼 사안이지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북중경협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한반도평화통일에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분단체제에서 통일문제는 남북한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서는 당분간 현재의 분단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기에 중국의 시장경제방식을 통해 북한의 시장경제는 학습되어지고 최소한 경제부문에서만만큼은 사고의 인식과 체제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둘째, 통일은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도 결국 통일비용이 문제인데, 현재의 남북한의 경제적 수준차이를 놓고 볼 때, 남한의 막대한 비용지출과 비용절감차원에서 남북한의 경제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북중경협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의 공백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인식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북한은 그동안의 남북교류를 통해 상호체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아직도 통일이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볼 때, 남북한 모두 상호체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 인식전환은 어떤 방식이 됐든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 중국, 베트남의 사례를 살펴볼 때, 시장경제체제로의 인식전환은 공통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즉 북중경협이 활성화 되면 될수록 남북한의 지향목표점으로 일치된다는 점에서 인식전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은 현재 북중경제협력이 급진전되는 상황에서 21세기 한국의 위상과 역할에 초점을 두고 동북아지역문제인 남북관계와 한미일관계, 한중관계, 한몽관계, 한러관계 등을 염두해 두고 전략적이고 탄력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북중경협관계변화는 북한과 중국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한반도통일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용현, “6자회담의 정체와 북핵문제 해법”, 2011년도 상생공영을 위한 통일학술세미나, 조선대 정책대학원세미나실, 2011년 5월 12일 발표논문, 2011.
- 김주삼, “중국 동북진흥계획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창지투개발계획을 중심으로”, 『동북아연구』 제25권 제1호, 2010.
- , 북중수교 61주년 평가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방안: 2012년 동북아정세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15집 제4호, 2010.
- 김흥규, “21세기 변화중의 미중관계와 북핵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제27권 제1호, 2011.
- 이기동,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권력구조”, 『국방연구』 제54권 제1호, 2011.
- 이영훈, “중국의 창지투개발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북한의 개혁·개방”, 『KDI 북한경제리뷰』 2011년 4월호.
-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0』, 2010.
- 통일부 통일교육원, 『통일문제 이해 2010』, 2010.
- 陳鋒, 『21中國与中國与日本』, 北京: 世界知識出版社, 2006.
- 『吉林省統計年鑒2001-2009』其中長春市和吉林市爲地區統計數, 2010.
- 王胜今, 趙儒煜, “長吉圖開發開放先導區的城鎮體系建設戰略”吉林大學·北京大學東北亞論壇(2010.7.20) 『東北亞區域合作与長吉圖開發開放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2010.
- 통일부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내국인 출구」, 2010.
『동아일보』 2008년 5월 28일.
『한겨레』 2010년 3월 10일.
『동아일보』 2011년 6월 9일.
<http://news.donga.com>(검색일: 2011.6.15).
<http://www.index.go.kr>(검색일: 2011.6.16).
<http://news.mk.co.kr>(검색일: 2011.6.18).

Changes in the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Analysis of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Kim, Joo-Sam

This study speculates on the effects changes in the Economic Cooperation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ill have on the futur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Korea's responses.

As China has risen to be one of the G2 nations, it has taken a new level in world order and this puts a focus on the safe management of local problems in East Asia. China and North Korea have developed a solid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political, economic, and military fields while maintaining special socialist systems in Northeast Asia. Reinfor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may bring general political change to the Korean peninsula and to Northeast Asia. This also has meaning in that the reinforced cooperative relationship is presented as another model for North Korean and Chinese relations.

North Korea has reinforce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itself and China further by requesting economic support from China with the purpose to overcome the stagnation in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since Lee Myeong-bak's government took office in February 2008. The changed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was caused by construction of North Korea's powerful nation, cooperation for Chang-JI-Tu development plan and the stagnation in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strategic understanding of North Korea.

These changes may affec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sulting ripple effects may accelerate changes in the political condi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fluences of an altered Chinese and North Korean cooperative economic relationship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it provides a chance for North Korea to open its gates. Second, it motivates North Korea to change

from having a heavy industry-centered policy to a light industry-centered policy. Third, it will save resources in the future cost of unification.

Korea's possible responses to these condi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should have a cooperative attitude to North Korea opening up. Second, it should have an attitude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plan of Chang-JI-Tu to overcome the stagnant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develop condi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 :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Political conditions on Northeast Asia, Environment for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투고일 : 2011.6.26 / 심사일 : 2011.7.10 / 심사완료일 : 2011.8.28